



구진열 국세청 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며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징수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등 고액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

국세청, 체납액 총 5조원 달해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입료를 쟁기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융·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000여명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세포·유전자 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첨단바이오법’ 법제화 또 불발

이달 중 주요쟁점 공청회 개최
내년 2월 법안소위서 논의
제약업계, 법안 조속통과 촉구

일명 ‘첨단바이오법’인 국회 첨단재생의료법의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패스트트랙 등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법들도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복지위 소속 전해숙·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병합된 법안이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지원해 희귀, 난치 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에서는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물론, 제외진단의료기기법안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등의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전해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할 것을 우려해 12월 중 먼저 공청회를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되는 내년 2월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9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권을 강화하려는 배경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지만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달 23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며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 의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약산업 육성법 통과가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추가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상생 군사시설 조성 일환

국방개혁 2.0의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에 116배에 해당하는 3억 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또 247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반도체적 인식시스템(RFID)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를 결정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탁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 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사기지법 제14조에 따르면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의 128만㎡의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수출효자’ 딸기, 생육환경 등 기술개발 성과

농진청, 작년 수출량 4298만 달러
난방비·선별·곰팡이 문제 등 해결

농촌진흥청은 증가세에 있는 딸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 에너지 절감, 수출용 딸기 선별·포장기술 등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딸기 수출량은 지난해 4298만 달러로 10년 전인 2007년 423만 달러보다 10배 뛰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이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출도 늘고 있다.

다 익었을 때 따는 내수용 딸기와 달리 수출용 딸기는 봄철에 50~70%, 겨울철에는 80~90% 익었을 때 수확한다. 이렇게 수확한 딸기는 유통과정에서 색은 빨갛게 변하지만, 당도는 낮아져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농진청은 생육 환경 제어, 겨울철 난방비 절감, 딸기 선별 기계화, 수출용 딸기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은 각종 센서와



국립농업과학원 이승기 농업공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딸기 수출을 위해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수출용 딸기 선별·포장 기술 등을 적용해 생산한 수출용 딸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장치를 활용해 수출용 딸기가 자라는 데 알맞은 빛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양액 공급 등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농진청은 이와 더불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용 딸기 생산 이력과 농산물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난방 기술의 경우, 온실 전체를 난방하지 않고 딸기가 온도를 민감하게 느

끼는 관부에만 배관을 설치해 20℃의 온수를 흘려보내는 부분 난방 기술이 제시됐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온실 온도를 8℃에서 4℃로 낮출 수 있게 돼 연료 사용이 30%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3% 늘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수출용 딸기 선별기는 딸기의 모양과 색상을 분석해 수출에 알맞은 딸기만 골라내는 장치다. 이 기계를 쓰면 시간당 1만 8000개를 정확도 90% 이상으로 선별할 수 있어 노동력 부담을 50% 이상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 밖에도 수출용 딸기가 6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개발했다. 수출 도중 공황할주로에서 제트엔진에 노출돼 열 손상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딸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룬 성과”라며 “다른 농산물의 수출에도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딸기는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일본 여자 컬링대표팀 선수가 한국딸기 맛에 감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법무부, 교정공무원 근무복 18년만에 교체

교정공무원 근무복이 18년만에 개선돼 내년까지 전면 교체된다.

이날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복을 형태면에서는 18년, 색상면에서는 9년 만에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6개국과 국내 경찰·소방 복장 등을 비교·연구하여 근무복 개선을 도출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일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색상은 기존 연하늘색(화이트 블루)이 민간 경비업무에 주로 채택되고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근무복을 기존 연하늘색에서 진감형색으로 바꿨다고 5일 전했다. /법무부

는 점을 감안해 차별성을 부여하고, 푸른색 수형복과 한눈에 구별되도록 진감형색(네이비 블루)으로 변경했다.

처음으로 보통형과 몸에 딱 맞는 모양 두가지(테일러·슬림 핏)를 도입해 착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넥타이 없이도 어울리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소매 부분에 태극 문양을 자수로 부착했다.

소재는 상의의 경우 최첨단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보온성과 통기성을 향상시켰다. 하의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섬유를 혼용해 신축성을 보완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직원 폭행’ 양진호, ‘갑질’ 추가 확인

노동부, 취업방해 등 총 46건 적발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력 행위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릿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 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플라가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



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

이 때문에 회사를 옮긴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